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안)
(2011~2020)

2011.1
(사)한국연안협회 이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목 차

I. 계획의 개요

II. 제1차 통합계획 평가

III.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IV. 연안통합관리 기본방향

V. 권역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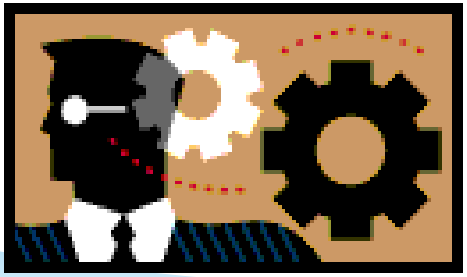
0. 시작하기 전에

국토공간 관리정책의 변화

육상 → 연안 (유인도서) → 무인도서 EEZ 해중

(~1996) | (1997~2002) | (2002~현재)

국토이용관리법(1973)



연안관리법(2009)

연안관리정책 발전과정

통합국토관리체제 형성
제3세대로 진입

기후현안 정책의제로 수용

준비기(~90년대 초반)

- 연안관리개념 소개 (전문가, 80년대 중반)
- 국가정책에 개념 수용 (90년대 초반)
- 사례지역 사업 시행

1996

✓해양수산부 창설(연안계획과)
✓제1차 해양오염방지5개년 계획

도입구축기(~'08)

- 연안실태조사
- 연안관리법 제정
- 연안통합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지역계획
- 신정책방향
  - 용도구역
  - 자연해안총량관리제
  - 하구역통합관리
  - 연안오염총량관리
- 관련 법률 제, 개정
  - 무인도서, 생태계, 습지보전, 공유수면, 환경관리 등

2008

✓국토해양부 설치

발전기('09~)

- 연안관리법 전면개정
- 3차 연안실태조사
-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Nam & Kang(2006)을 재구성

연안관리 체제 변화 및 특징

구분	도입구축기(제2세대)	발전기(제3세대)
핵심 관리 목표 및 현안	▪ 환경보전-개발의 조화 ▪ 환경적 지속가능성	▪ 기후변화가 현안으로 등장 ▪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리수단	▪ 정책계획 형태의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사업	▪ 정책방향 및 체계적 공간관리 병행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해역용도제)
관리범위	▪ 연안해역과 육역 ▪ 통합계획 시간범위 : 미설정	▪ 직접 통제수단은 연안해역에 한정 ▪ 통합계획 시간범위 : 10년
공간관리 특징	▪ 해양의 전분야를 관할하는 종합해양 행정체제	▪ 공간관리의 통합성, 조정기능이 강화된 통합국토관리체제 형성
정책 결정 및 시행체계	▪ 상의하달(top-down) 중심,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낮은 수준	▪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bottom- up) 비중 균형 ▪ 예측불가능성, 복잡성 증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관리가 관건

그간의 추진 경위

- □ 2008. 8~2009. 9 제2차 연안실태조사 수행
- □ 2009. 10 연안실태조사 결과 및 신 연안관리제도 대상 설명회
- □ 2010. 1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방향 설명회
- □ 2010. 4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방향 지역협의회
- □ 2010. 4~6 연안관리 수요 조사
  - 지방자치단체, 어업단체,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등
- □ 2010. 4~5 시범연안 선정, 현장 답사 및 기초자료 분석
- □ 2010. 6~9 중간보고회 개최, 권역별 수요분석, 권역별 전문가 자문
- □ 2010. 10 연안통합관리 정책설명회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인천지역협의회

I. 계획의 개요

- ✓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성격
- ✓ 계획의 기본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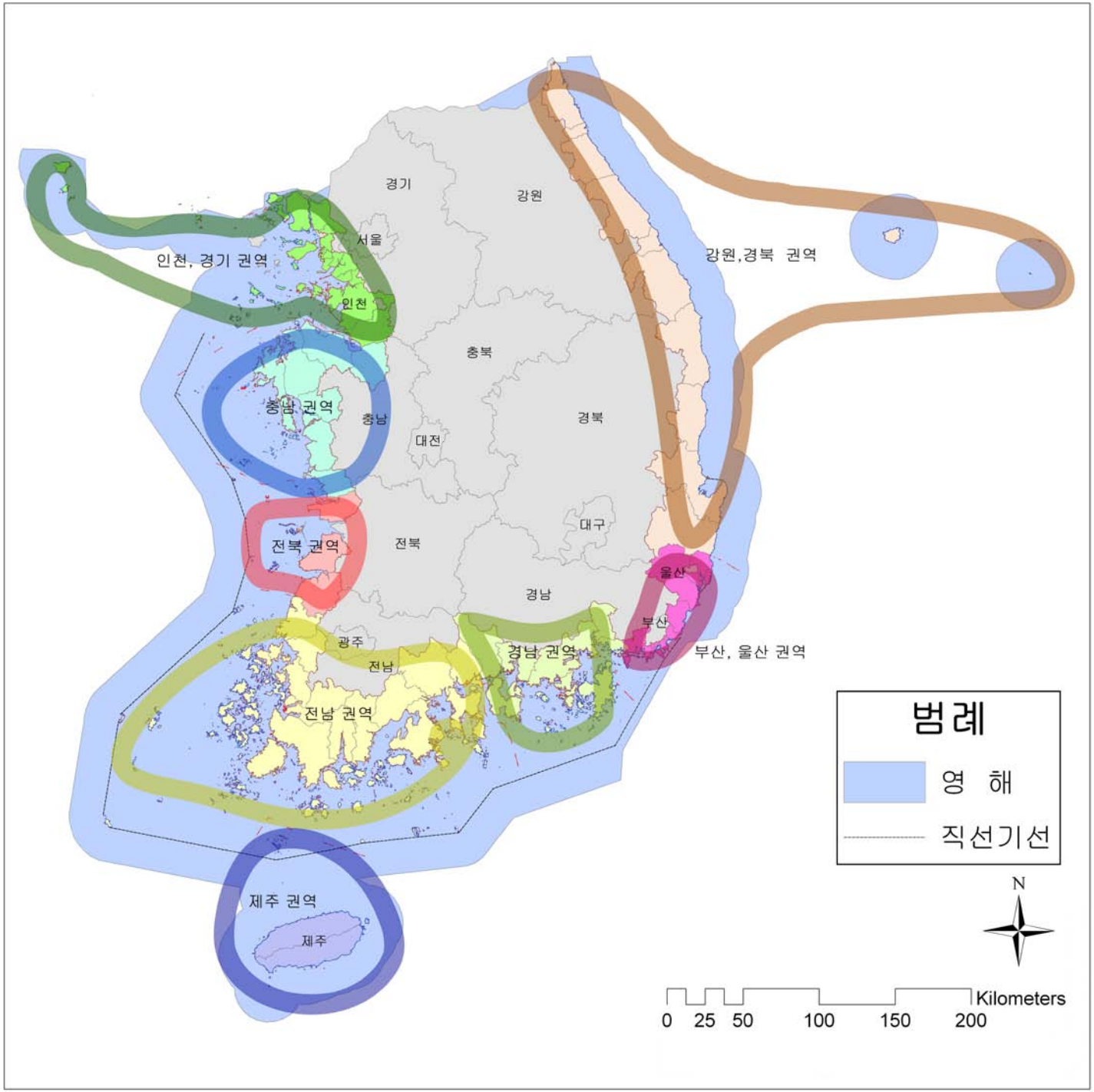
1.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계획의 법적 근거

- 연안관리법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10년마다 통합계획 수립

계획의 성격

- 연안의 종합적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
- 부문 간 상충을 조정하고 장래 발전방향을 담은 정책계획
- 연안의 바람직한 미래상 실현을 공간에 투영하는 공간계획


경기
강원
서울
인천, 경기 권역
인천
강원,경북 권역
충북
충남 권역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전북 권역
전북
울산
경남
부산
광주
경남 권역
부산, 울산 권역
전남
전남 권역
제주 권역
제주
범례
영 해
직선기선
N
0 25 50 100 150 200
Kilometers

2. 계획의 기본 틀

기조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조성,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4대 기본목표

- ❖ **통합연안(Integrated Coast)**
- ❖ **생명연안(Eco-based Coast)**
- ❖ **정주연안(Attractive Coast)**
- ❖ **협력연안(Comanaged Coast)**

5대 추진전략

-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생태계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연안 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10대 중점 추진과제(2011~2020)

- ❖ 연안을 8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맞춤형 관리 추진
- ❖ 연안해역용도제(4개) 및 기능구제(19개) 시행
- ❖ 해안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구역 및 생물종 관리 강화
- ❖ 오염해역 환경복원 및 환경용량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 ❖ 기후변화 적응형 연안공간 관리 및 연안정비 시행
- ❖ 연안 갈등 발생 사전 예방 및 효과적 사후 관리 실현
- ❖ 연안관리 국제협력 강화 및 남북한 연안협력 추진
- ❖ 공유수면의 공공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 4대 실행력 확보대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집중 투자

4대 실행력 확보 대책

- 연안 실태 모니터링 및 연안정보의 체계적 관리
- 연안관리 실태 주기적 점검 및 이행 평가 시행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강화 및 연안관리 행정 효율화
-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II.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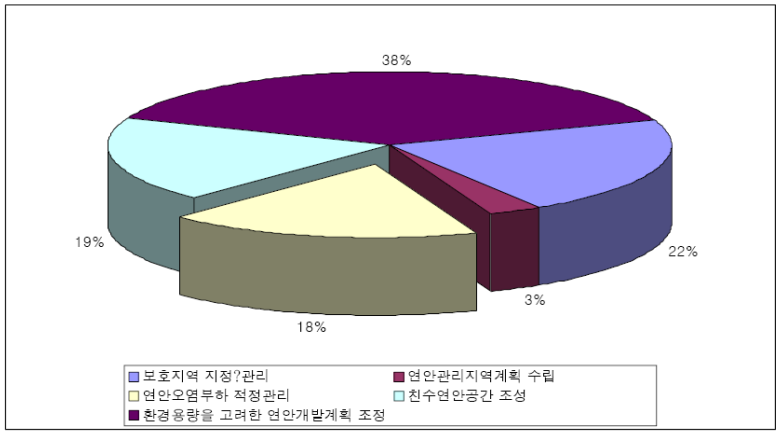
✓ 1차 통합계획 추진 실적

✓ 2차 통합계획 수립 시사점

1.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추진실적

제1차 통합계획 추진 실적

- **세부정책방향 현황 :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분야가 215건으로 38.4% 차지**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32.8%
- **이행실적 : 560건 중 236건이 이행완료(42.1%), '이행중'을 포함하면 69.1%로 높은 수준**
  - 연안개발계획 조정 67.4%,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58.8%
  - 모든 권역에서 50%이상의 이행실적 : 서해남부 1(65.6%), 서해중부1(61.3%), 남해중부(68.2%)



(단위 : 건, %)

추진전략	계	미이행	이행완료	이행중	완료율
보호지역 지정·관리	122	70	40	12	32.8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17	3	10	4	58.8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100	33	26	41	26.0
친수연안공간 조성	106	28	15	63	14.2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215	33	145	37	67.4
계	560	167	236	157	42.1

1.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추진실적

연안관리 관련 실적

76%가 '06년 이후 수립

<표 II-2-3>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2010. 10월 기준)

수립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개소(67)	16	23	23	5

[표 II-2-2] 제1차 연안정비계획 추진 실적(2009. 9월 기준)

사업량 기준(건)			사업비 기준(억원)		
계획 사업	시행 사업	시행율	사업비	투자실적	투입율
631	281 (완료 232)	45%	7,823	4,334 (국비 2,456)	55%

- **연안관리 지원 법정 조사 :** 연안실태조사(연안기본조사) 3회, 바닷가 실태조사, 무인도서 실태조사, 생태계 조사, 갯벌조사, 침식모니터링, 전국해안선 조사 등

- **연안관리 지방조례 제정 : 39개 지자체**

2.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시사점

- 합리적 연안이용과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
- 신 연안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집중 투자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연안공간 적응정책 강화
- 연안보전사업 중심의 연안정비사업을 녹색가치를 고려하여 방향 조정
- 연안수요 간 갈등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역단위 조정체계 강화
- 지역사회 연안통합관리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
- 통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세부정책방향 및 사업의 목표 연도 설정

III.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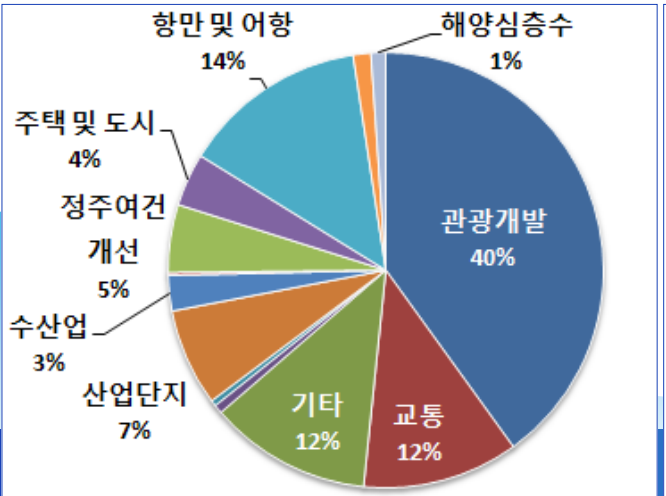
- ✓ 현황 및 문제점
- ✓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 ✓ 제2차 통합계획 인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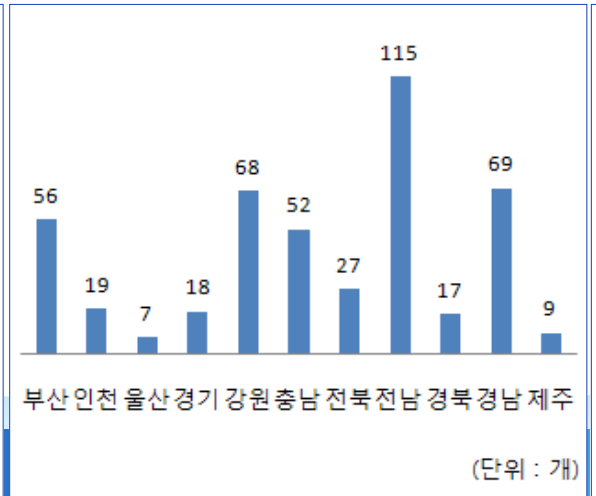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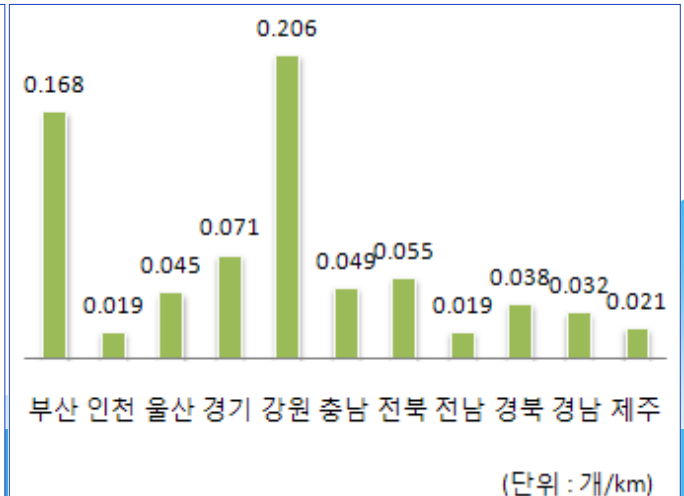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영해 면적 86,891㎢로 국토면적의 87%**
  - 연안인구 1,339만명, 지난 10년간 약 6%증가

- **해안선 12,638㎞, 육지부 인공해안선 비율 증가(26.2%('00)→36.6%('09))**
  - 연안 의존형 산업 개발(조선, 해양관광, 항만 및 어항 등),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으로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 증가 예상

- **연안의 고밀도 이용 및 개발 압력 상존**
  - 관광(40%), 항만·어항, 교통, 산단 개발이 대부분 차지, 전남이 115건으로 우세
  - 해안선 길이 대비 이용 및 개발 건수는 강원, 부산, 경기가 많음







1. 현황 및 문제점

- **비도시 연안지역의 인구 이탈과 정주여건 악화**
  - 연안의 도시인구 연평균 증가율 0.66%, 반면 비도시 인구 연평균 증가율 -1.63%
- **개발(항만, 에너지, 산단 등)과 보호(해양환경, 생태자원) 간 이해상충 상존**
  - 항만 및 산단 개발로 인한 연안환경 변형.훼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해상국립공원의 해제 민원, 조력발전 개발로 인한 수산업 제약 등
-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통적 어촌사회 쇠퇴**
  - 어업인구 연평균 증가율 -3.42%, 고령화 추세(20.8%('00)→33.7%('09))
  - 어가소득('09) 33,945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2.4%에 불과
- **COD기준 연안수질 II 등급 유지, 고밀도 개발 및 반폐쇄성 해역 오염 지속**
- **연안관리가 단기 성장중심 사업**(매립, 정비, 자원채취) **위주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조정 미흡**

2. 관리여건 및 전망

- **지난 10년간 중앙정부 및 연안 기초자지단체의 연안관리 체제 강화**
  - 67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38개 지자체 연안관리 조례 제정
  - 관계기관 협의와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연안관리정책 추진
  - 연안실태조사·바닷가실태조사·연안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정책지원시스템 강화

-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신규 업무(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수요발생**

- **연안 관련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현안으로 등장 예상**
  -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변화에 의한 연안재해 우려 증가**

- **대규모 개발지역 주변의 해양환경관리 신규 수요 증가**
  - 질소, 인, 중금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수요 발생

2. 관리여건 및 전망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증가, 관리가 체계화 될 것으로 전망**
  - 국토면적의 10.1%가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
  - 복원정책 개발, 관리 수단 마련 등으로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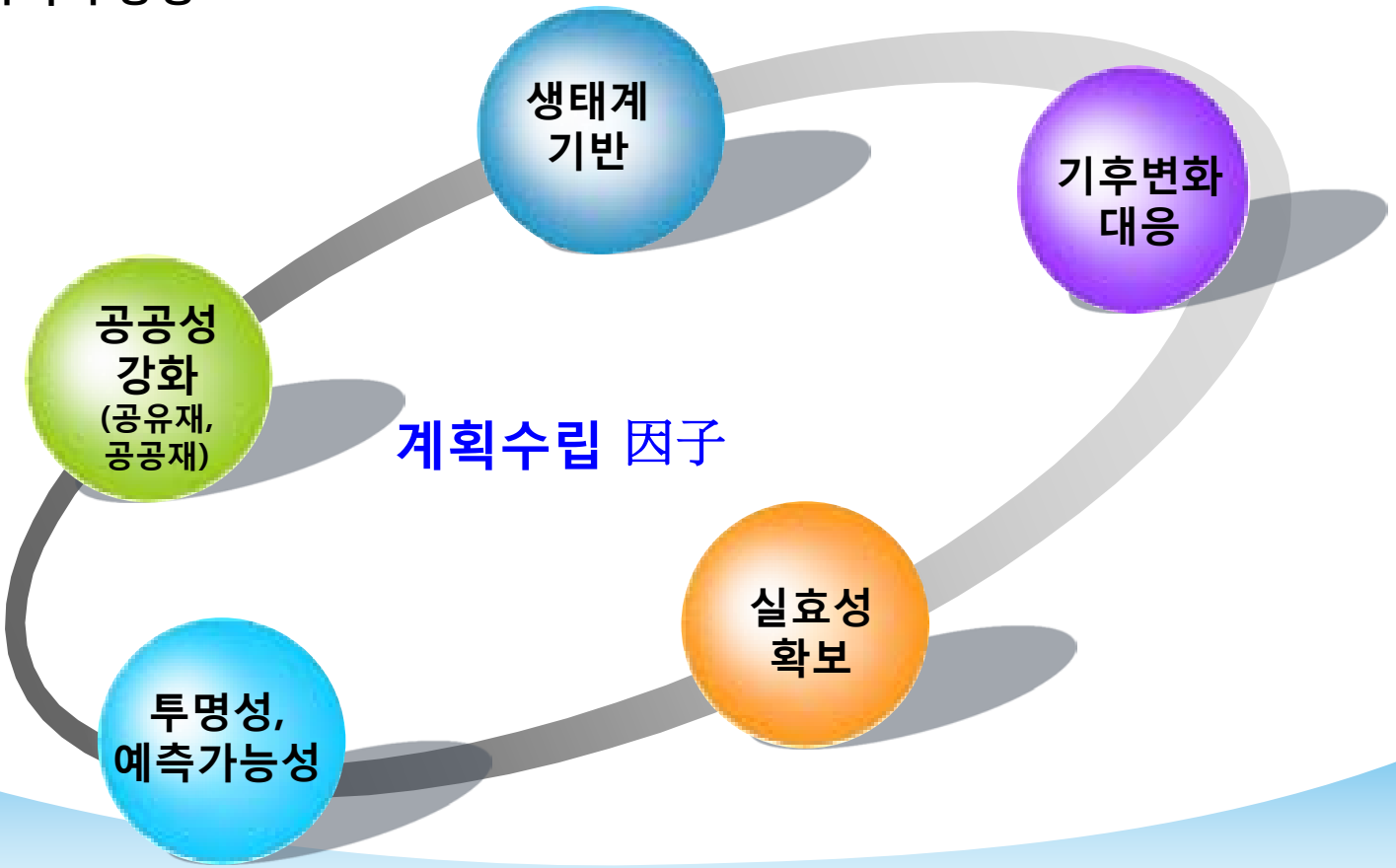
-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연안재해 대응 정책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
  - 시화 조력발전, 울돌목 조류발전이 추진 중이나 일각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지적
  - 기후변화로 연안지역 사회경제활동 영향 저감 및 대응 시스템 필요

- **체계적·계획적 연안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도출 필요**

지 표	2010	2020
전국 인구 (천명)	48,875	**49,327**
연안 인구 (천명)	13,547	**14,848**
연안 하수처리율 (%)	80%	**90%**
수산물생산량 (천톤)	3,411	**3,940**
컨테이너 화물(천TEU)	19,935	**32,731**
해양레저보트 (척)	3,833	**10,461**
연안해양보호구역 면적	10%	**13%**

3. 제2차 통합관리계획 수립 인자 도출

- 1차 통합계획 평가 및 시사점
- 도입구축 및 발전기의 특성 차이
- 관리여건 및 전망
- 국제사회의 동향



IV. 연안통합관리 기본방향

- ✓ 계획의 기조 및 기본 목표
- ✓ 추진전략 1: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 추진전략 2: 생태계 건강성 증진
- ✓ 추진전략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 ✓ 추진전략 4: 연안 거버넌스 구축
- ✓ 추진전략 5: 연안관리 실행력 확보

0. 계획의 기조, 기본목표, 추진전략

계획의 기조

-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 연안지역 환경지속성과 녹색경제 실현
  - 향유와 정주의 매력이 넘쳐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연안 실현
  - 동반자적 협력으로 상생하는 해양생산 체제 구현

계획의 기본목표

-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
  -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조기정착
- 생태계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생명연안
  - '20년까지 보호구역 영해의 20%, 공유수면 변형 갯벌면적의 0.2%이내, 하계 II등급 유지(적조제로)
-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
  - 비도시 연안지역 주민소득 '20년까지 전국 평균 90%('07년 80%)
-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

추진 전략

-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연안해역 4개용도로 구분, 자연해안을 5년단위로 목표 설정 관리
- **생태계 건강성 증진**
  - 연안해양보호구역 확대, 특정 생물종 체계적 관리, 생태계 복원, 현명한 성장 (smart growth)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취약성 고려 맞춤형 연안공간계획, 적응형 연안관리
- **연안 거버넌스 구축**
  - 갈등 사전예방/사후관리, 참여협력 기반 연안관리책임제, 남북협력, 국제협력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보전이용/개발 국토부 협의 강화, 공유수면관리 개선, 주기적 점검. 이행평가 등

1.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서해연안을 중심으로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급격한 감소
  - 서해연안은 지난 30년간 자연해안선 급격히 감소, 중요 서식지 10개에서 8개소 감소
- 비계획적 개발, 점・사용으로 난개발 및 자연해안 훼손
  - 주로 소규모 이용・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발생
- 자연해안의 계획적 관리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조기 정착에 한계
  - 지자체 인식 부족, 재원 부족, 관련 기초자료 미흡 등 제약
- 연안지역 용도구분 법적 근거 미약 및 용도구분 기준 불명확
  - 과거에는 지침에 근거한 용도구분, 개발지향적 용도지정 선호
-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별 실질적인 관리수단 미약
  - 연안용도해역 별 공유수면 점・사용 등 다양한 해역이용 행위 관리수단 미흡

1.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추진과제

1) 자연해안 관리 인프라 구축 및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조기 확정

- 도서부 해안선 조사(2012), 국가(2011) 및 지역(2012) 자연해안관리목표 확정 등

2) 자연해안 관리 지원체계 강화

- 연차별 자연해안 관리 보고서 작성, 지역 자연해안관리목표 기술검토 지원 등

3)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참여형 연안용도해역제 시행

-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 마련(2011), 지역계획 수립 초기 주민 참여 보장 등

4) 연안의 관리실태를 반영하여 연안용도해역제 운영의 유연성 및 합리성 제고

- 연안용도해역별 공유수면 점・사용 기준 마련(2011), 관리연안 해역기능구 중복지정 등

5) 연안 대상 보전・이용 및 개발 행위 시 국토해양부와 협의 강화

- 매립 수반 개발사업 일몰제・이력제 적용, 자연해안관리목표・지역계획 미수립 지역 개발 제한 등

6)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용도해역제, 타 연안 공간관리제도 간 체계적 연계

- 연안용도해역제와 부합한 해안유형 구분 및 관리, 무인도서 관리유형과 연계 등

2. 생태계 건강성 증진

현황 및 문제점

- 서남해안 반폐쇄성 해역 및 동해연안의 유기물 오염도 증가
  - 보령~전주포, 동해안 연안 COD, 남해안 해역 평균 저층 COD>표층 COD
- 해역별 영양염류 농도 증가
  - 전남 지역 반폐쇄성 해역과 제주 연안, 동해연안 등 청정해역에서 뚜렷한 증가 경향
- 연안 시·군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
  - 34.1%(`97) → 52.8%(`02) → 79.4%(`07), 전남연안(35.3%), 충남연안(46.5%), 전북연안(65.3%)
- 해양생태계조사 확대로 지식기반 강화 및 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기본조사(해양생물 9,574종 등록), 연안습지기초조사(제2차 `08~`12)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 9개 종류, 564개소, 10,027㎢, 갯벌중심
- 연안·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효성 부족
- 연안완충공간(해안사구, 해안림, 석호) 등 관리 미비
  - 해안사구(133개소), 해안림(296.8㎢, 연안면적의 8.7%)

2. 생태계 건강성 증진

추진과제

1) 연안해역과 유역의 통합적 관리

- 연안지역 환경관리제도(환경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진단을 통한 실효성 증진
- 연안유역 통합적 관리를 통한 해역수질 관리
- 하구언 등 연안 담수호 수질관리

2) 중요 연안생태계에 대한 보전적 관리수단 적용

- 해양생태계 건강성 중심의 연안해역 관리 : 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마련
- 해양생태계 핵심공간(ecospot) 복원 및 관리 강화
-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 습지, 해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해안림)

3)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강화

- 보호구역 관리청 관리역량 제고
- 보호구역 관리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
- 보호구역을 통한 지역발전 모범사례 육성
- 보호구역 생태계 서비스 증진 효과 평가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및 연안재해 우려 증가
  - 금세기 말까지 최대 59㎝ 해수면 상승 전망(IPCC)
  -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률 : 4.02㎜

- 구조물 건설사업 위주의 단순한 연안정비사업 시행
  - 호안보강사업의 자연해안 훼손문제 대두
  - 주변 연안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고려 부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재해의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미흡
  - 사후대응 위주의 연안재해대응사업 추진
  -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개발 미흡

- 안정적・지속적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부족
  - 연안환경 영향검토 및 장기조사자료 미흡 등의 기술적・과학적 여건 취약
  - 지역별 사업추진 실적의 불균형 심화 및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재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추진과제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 연안지역 기후변화에 따른재해취약성 평가가체제 구축
- 침수흔적도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 재해취약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건축・건설 관련 규정 개선
- 연안생태계 영향조사 및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2) 과학적 조사체계 구축

-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확대(120→200개소)
- 광역단위 표사계 이동조사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관리의 기술 강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정비시설의 설계기준 마련
- 연안시설물의 안전도 검토방안 마련
- 자연과 조화되는 가역적 대응기술로서 미래형 연성공법 개발 및 적용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추진과제

4) 신개념 연안정비사업 추진 모델 정립

- 단순한 해안선 보강이 아닌 '해안선의 질 관리'를 위한 연안정비
- 연안정비 사업효과 극대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 제고 방안 마련
- 피해원인 조사, 새로운 기술 적용, 개별 사업의 통합・복합 사업 등을 확대

5) 연안가치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와 연계한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추진
- 해안선・연안경광 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관리방안 마련
- 환경개선+연안접근 및 문화휴양공간+기후변화 대비의 생태적 재개발 추진

6) 연안정비계획의 추진력 강화

- 사업의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 기술검토 및 자문을 위한 전문조직의 구성・운영

7) 연안정비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연안정비사업 사후관리지침 마련
- 사업시행 평가결과의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연계

4. 연안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자원개발 관련 부처 간, 부서 내 경쟁 및 정책 갈등 발생
  - 바다모래, 해양심층수, 신재생에너지 :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 국토해양부 내 환경담당부서와 개발담당부서 간 정책 조율 미흡
- 개발과 보전의 조화, 갈등방지를 위한 통합과 조정에 관한 행정체제 미비
  - 연안·해양의 이용 대형화, 원양화 ↔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 연안·해양 관련 기능 분산과 조정 미흡, 연안 공공갈등 조정 기구 부재
- 남북한 갈등 및 대립으로 연안 생산성 제한
-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력 시도와 해양 접경지역 발전 수요 확대
- 해양환경 분야 주요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로 국가 위상 제고
  -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한 국제습지센터, NOWPAP 사무국(부산), YSLME 사무국(안산), PEMSEA 트위닝사무국(서울) 등 유치

4. 연안 거버넌스 구축

추진과제

1) 연안 갈등관리(조정) 기제 구축

- 연안 갈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사전 예방)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절차적 정당성 확보·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와 실질적 권한 부여
- (사후 관리) 합의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조정 기제 구축 : '지역연안관리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내 '갈등관리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 2개 광역지자체가 포함된 경우(금강하구, 아산만, 광양만 등)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시 해당 지자체 참여

2) 연안 갈등관리 역량 강화

- 연안 이용개발 수용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수단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 갈등관리 지원 기관 육성
- 지자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갈등관리 교육 의무화

4. 연안 거버넌스 구축

추진과제

3) 남북 연안관리 협력 체계 구축

- 남북 접경 연안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 국제기구와 공동운영
  - ※ 연평도 북방 마력리도 : 평화 정착의 상징거점
- 한반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 : IUCN, CBD를 중심으로

4) 동아시아 연안관리 허브(Hub) 구축

- 국제 위상 제고와 '신아시아'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해양환경보전 협약 대응, 지역해 차원 해양환경보전 협력 강화
  - '아시아 해양평화공원 포럼' 운영
- 연안관리 국제협력 거점으로 '연안관리 국제협력 센터' 설립
  - 우리나라 연안관리 이행 경험과 지식을 전파
  - 연안공간계획, 연안환경관리,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별로 특화하여 협력

5.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 종합조정시스템 미흡
-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 공공접근성 제한 및 불법매립으로 공공이익 침해
- 체계적인 연안실태 모니터링 및 연안정보 관리/활용 미흡
- 주기적 점검 및 이행평가 부재로 효과적인 연안관리 한계
- 연안 이용개발 검토 조정 및 통합적 심사 기능 취약
- 개발-보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연안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
- 무분별한 연안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 부족

5.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추진과제

1) 공유수면의 공공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매립관련 타법 의제조항 삭제/건별 심사강화, 매립토지 사유화 금지/임대제, 점사용 연장 수탁자 의무준수 평가, 공유수면/연안관리 전담 집행조직 설치

2) 연안실태 모니터링 및 연안정보의 체계적 관리

- 연안해양정보 조사수집-관리체계 통합, 문제해결 지향성 공간분석 개발 등

3) 연안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및 이행평가 시행

- 매년 해역관리청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인센티브 또는 인허가와 연계

4)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강화 및 연안관리 행정 효율화

- 민간위원 보강/인력풀제/전원합의제로 운영, 연안해양 평가 및 관리지원센터 설치

5)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연안관리협의체 구성, 연안지킴이 실효성 확보, 지자체 국내외 연수 활성화, smart-mobile service

V. 권역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인천·경기권역
2. 충남권역
3. 전북권역
4. 전남권역
5. 경남권역
6. 부산·울산권역
7. 강원·경북권역
8. 제주권역

1. 인천·경기권역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현황 및 여건	현 안
• 높은 연안인구밀도·인구 증가 • 신도시, 항만 등 연안 개발 심화 • 사회간접자본(항만, 전력) 투자 집중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 연안 생태자원 보유 • 높은 조류에너지와 낮은 수심으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 급증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태·해안관광 사업 활발히 추진 • 서해5도, NLL 등 남북관계 직접 영향권	• 항만·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핵심 개발지역으로 부상 • 경제자유구역·항만배후지 개발로 도시공간구조 변화 • 연안 수질 악화 우려 • 지역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연안 고유 경관 사라짐 • 연안 저지대 도심, 기반시설, 도서의 재해 위험 및 예방 인식 확산 • 도로, 항만, 관광, 에너지 등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로 갈등 확대

1. 인천·경기권역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 비 전 >

도서-육지부, 개발-보전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연안

< 기 본 목 표 >

- ❖ 연안도시의 생태적 재개발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증진
- ❖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조기 정착
- ❖ 자연해안 및 서식지 손실 Zero화
- ❖ 한반도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전진 기지 구축

1. 인천·경기권역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시 기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①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 ② 연안용도해역제 도입 ③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인천연안, 시화호는 광역지자체가 수립	2011. 상 2011. 상 2011. 상
생태계 건강성 증진	①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관리계획 수립 : 백령도물범서식지, 덕적도의 해안사구 등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강화 ③ 연안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통한 보전 및 복원 ④ 오염해역 환경 개선·개발에 의한 인근 연안 수질 관리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경인 아라뱃길, 송도 매립 인근 ⑤ 한강하구·인천연안 해양쓰레기 책임관리 강화	계획기간 계획기간 2015 2015 계획기간
기후변화 대응 강화	①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해 취약성 평가·적응 대책 추진	계획기간

1. 인천·경기권역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시 기
연안 거버넌스 구축	① 서해 접경연안 국제해양평화공원 추진 ② 연안·해양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강화 ③ 국책사업의 사회적 합의와 갈등 점검 후 추진 : 송도 매립, 시화호 조력발전, 강화조력 및 인천만 조력 등 ④ 연안·해양 갈등조정 메커니즘 구축 ⑤「도시·항만·연안 파트너쉽」구성	2015 2015 2013 2015 2015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① 공유수면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용도전환에 관한 대응 체계 마련 ② 해안선 경관 계획 수립 : 연안 특성별(어촌, 어항 등) 연안경관 가이드 라인 마련 ③ 도서 정주여건 개선 ④ 도서 주변해역 및 해양에서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시행 :"시화 조력발전"을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가늠터(Test Bed)로 활용 ⑤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연안·해양의 생태학적 영향 평가 실시	2015 2015 2013 2013 계획기간

감사합니다